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무엇을 위한 선거법 개정인가?

시키는 장치인 선거제도가 소수 득표를 한 정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면 민의를 의정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대의 민주주의가 퇴보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거대 정당들은 자신들이 얻은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가령 더불어 민주당은 정당 득표에서 25.5% 득표했지만 총 의석수에서 41%(123석)을 얻었다. 무려 15.5%의 보너스(의석률-득표율)를 획득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26.7%의 정당 득표를 했지만 실제 의석률은 12.7%(38석)에 불과했다.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기존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몇 가지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의석 배분 방식이 너무 복잡해서 유권자의 투표 선택권을 훼손시킬 수 있다. 유권자는 자신이 던진 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아야 의미 있는 투표를 할 수 있다. 가령 기존 선거제도에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후보가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사표를 생각해 다른 정당 후보를 찍고, 정당 투표에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게 투표할 수 있다. 이른바 '전략적 분리 투표'가 가능하다.

2016년 총선 직후 한국선거학회가 실시한 국민의회 조사에 따르면,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했던 유권자의 12.6%가 정당투표에서는 국민의당을 지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은 당별 득표 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를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6개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복잡한 배분 방식을 이해하고 투표할 유권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비례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유권자의 전략적 선택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더구나 지역주의 타파 명분으로 지역구(225석)의 1/3에 불과한 비례대표 75석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배분한다는 것도 난센스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지역구와 비례구 의석수가 298명으로 동일하다. 일본에서는 지역구 289석, 비례구 176석, 뉴

질랜드에서는 지역구 63석, 비례대표 50석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는 적정 규모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간과한 채 적은 비례대표 숫자 비례성 강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되면 정당제가 부상되고, 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들 간에 '권력 나눠 먹기식 연대'가 이뤄질 수도 있다. 어찌된 정치 갈등과 정치 불안정이 일상화될 개연성이 있다.

미국 정치에서 보듯이 다당제는 선이고 양당제는 악이란 명제는 없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제도를 공수처법과 연계해 처리하는 식의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합의 처리돼야 한다. 득표-의석간 비례성 증대도 중요하지만 정치 제도 간의 조화성,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정치의 제도화, 그리고 정치 신뢰 회복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종교칼럼

'고집'과 시지프스의 형벌



임형준
순천 빛보라교회 담임목사

그의 손을 벗어나 제 무게 만큼의 속도로 사정 없이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버린다. 시지프스는 다시 바위를 밀어 올리는 일을 쉬지 않고 반복해야만 했다. 그는 절대적 바위를 언덕 정상 위로 올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영원히 바위를 굴러야 했다. 결코 끝낼 수 없는 일을 영원히 되풀이해야 하는 운명이었다.

바위를 굴러 올려 정상에 가까워지면 그 돌은 다시 굴러 떨어지고 다음날 아침 굴러 떨어진 돌을 다시 밀어 올려야 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적 형벌에 대한 이 신화의 이야기는 희망 없는 노동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고 매일 반복적인 삶을 살아간다. 바쁘게 오늘과 내일을 들락거리려는 무기력한 일상의 바늘이 모든 사람들을 쫓아 버렸다.

매일 노예처럼 바위를 굴리는 삶의 반복은 형벌이다. 이렇게 길들여진 인간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며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을 회피한다.

매일 밥벌이에 눈치를 보며 꾸역꾸역 다시 굴러 떨어질 돌을 밀어 올리며 살아간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말한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 인즉 내가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 3:18-19) 맑껏 노래하고 뛰놀았던 자유의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간다. 죄로 인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의 일상은 노역이며 지옥의 고통이다.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사람마다 무겁고 두꺼운 고집이라는 성벽을 만들어 안정감을 누리고 그 안에서 에덴동산의 회복을 꿈꾼다.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집의 성벽을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유산으로 남긴다. 그렇다면 노래가 절규로 변하고 기쁨이 슬픔으로 변해버린 고집스러운 삶을 과연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자기의 판단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우겨서 승관이 되어 버린 고집과 맞서야 한다. 고집은 어떤 선택이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절대 가지처럼 굳림하며 왕 노릇을 한다.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고집은 생존의 본능처럼 강렬하여 자기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하다. 판에 박힌 생활을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새장에 갇혀 무기력과 낙담의 모이를 먹으며 쉬지 않고 형벌의 바위를 굴리며 침묵과 외면, 거짓과 속임, 퇴폐와 게으름의 알들을 낳을 것이다. 돌이 떨어진다면 이제 다시는 계곡 밑으로 내려가 돌을 굴러 올리지 않고 삶의 어디에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음을 보여야 한다.

고집을 물리치면 바위가 멈춘다. 이윽고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던 시지프스의 신화는 파괴되고 자유의 몸으로 꿈과 현실 사이를 넘나들 것이다. 돈과 욕망의 쇠사슬에 묶여 있던 사지가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참 자유는 가치와 인간성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제 심장이 빠르게 작동되고 몸이 반응하고 숨을 추고, 입술은 노래하고, 눈이 뜨여 아름다움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기고

광양항 배후 단지 조기 확보로 질적 성장을



신승식
전남대학교 교수

(1115만㎡)를 공급하여 석유·화학, 해양 산업, R&D 등이 집적화된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컨테이너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아시아 로테르담 모델'이란 석유·화학, 해양 산업, R&D 등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해양 산업과 R&D의 기반이 매우 취약한 광양항의 현실에서 자칫 컨테이너 역할 축소에만 방점이 찍히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의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은 인간 지능 수준의 AI가 개발되는 '특이점'(singularity)에 도달하면 이후 AI 발전은 인간의 손을 떠나 스스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에서 '특이점'은 1995년 일본의 고베 지진이었으며, 광양항의 특이점은 컨테이너 300만TEU 도달 시점으로 보인다. 컨테이너의 경우 일단 특이점에 도달하면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에 의해 물동량 창출이 비약적인 선순환 국면에 진입한다.

당초 정부와 항만 전문가들은 광양항이 2006년에 특이점(300만TEU)에 도달하고 2011년에는 500만TEU를 넘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2019년 현재까지 500만TEU는 고사하고 300만TEU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유로 광양항의 배후 부지와 교통망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했던 점을 들고 있다.

현시점에도 우려스러운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에 제시된 광양항의 '아시아 로테르담 모델'은 1115만㎡에 달하는 대규모 항만 배후 부지 확보가 선결 조건이다. 그래야만 위에 석유·화학, 해양 신산업, R&D 등이 집적화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기본 계획에서는 대규모 항만 배후 부지로 3단계 투기장(318만㎡)과 광역 준설토 투기장(797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완공 연도는 빨라야 2030년이다. 따라서 광양항의 로테르담 모델은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한 계획이다. 현 상황에서 현실감이 많이 결여된 느낌이다.

그러나 로테르담 모델은 차치하더라도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광양항의 항만 배후 단지는 2020년에 임대율이 100%에 도달해 이후 공급 부족에 직면할 전망이다. 2025년에 북측 배후 단지(11만㎡)가 개발될 예정이지만 이는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항만 배후 부지 개발에 앞서 우선적으로 세풍 산업

단지(242만㎡) 등 인근 지방 산단을 광양항 항만 배후 단지로 확보하여 승통을 띄워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일날 막 알떡이 집적화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 항만의 물동량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닥칠 수도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자국 영해의 카보타지(cabotage, 외국적선의 연근해 수송 금지)를 해제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글로벌 선사사의 중국 연근해 직접 수송이 가능해져 우리나라 항만의 환적 물동량이 50% 이상(연간 650만TEU) 감소한다는 끔찍한 전망도 나온다. 특히 부산항의 경우 환적 물동량이 53%를 차지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으며, 광양항도 24%가 환적 물동량이라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물동량 위기는 우리나라 항만 정책의 변혁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의 항만 정책이 물동량 확보라는 양적 팽창 위주였다면, 이제는 항만 내부 가치 확보라는 질적 성장 정책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후 단지 확보를 통해 수출입 물동량은 물론 2.5%에 머무르는 부가가치 환적 물동량의 비율을 크게 높여야 한다. 지금은 무엇보다 항만의 질적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社說

'5·18 사진첩' 1~4권도 반드시 찾아내야

보안사령부의 '5·18 사진첩'이 39년 만에 공개돼 5·18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막상 사진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포 및 학살 경위, 헬기사격, 암매장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핵심 실마리로 삼을 만한 자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보안사의 5·18 사진첩은 전체 열일곱 권 가운데 네 권이 빠진 열세 권(5권~17권)이다. 이들 사진은 보안사가 5·18 당시 직접 촬영했거나 신문사 등에서 압수한 것으로 계엄군의 공식 자료란 점에서 5·18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논란을 잠재울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시민군 속에 잠입해 첩보활동을 한 계엄군 '편의대'의 존재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 외에는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거의 없었다. 5·18 사진첩이 속된 감정과 같은 존재가 된 이유는 핵심 자료인 1권부터 4권까지가 빠져 있어 때문이다. 군의 자료 관리 원칙으로 볼 때 순번이 중요하고 통상 앞 순번일수록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만큼 사라진 1~4권 사진첩에 발포 및 학살 경위나 암매장 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 광주에 내려온 계엄군 지휘부 모습이나 사진첩 5권부터 등장하는 것을 보더라도 사라진 1~4권에 군 활동 전반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5·18진상조사위원회 조사가 따르면 1~4권은 1993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폐기됐다. 이 시기는 전두환·노태우 군부정권이 끝나고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선 시점으로 군이 5·18의 진상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폐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본이나 복사본이 어디가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18 진상을 밝히려려면 사라진 보안사 사진첩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보안사가 순순히 제공한 자료에 만족할 게 아니라 당시 보안사 관계자들을 소환해서라도 사라진 사진첩의 행방과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이 5·18 진상 규명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미디어 월 철거 후 재활용 등 면밀한 검토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 온 '미디어 월'(media wall)이 철거될 예정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잇그제 발표한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설계 초안'에 따르면 문화전당 복원 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2022년까지 미디어 월을 철거한다는 것이다. 5·18 당시에 없던 건축물인 데다 복원된 도청 건물을 가리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옛 전남도청 후면에 설치된 미디어 월은 가로 75m, 세로 16m 규모의 철골 구조물로, 그 안에 각종 영상을 표출하는 일종의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다. 2017년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 의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문화전당 측이 미디어아트 활성화를 위해 설치했다.

미디어 월의 매력은 야간에도 화면을 통해 미디어아트는 물론 다양한 전시 작

품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개최된 '2019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에서도 미디어 월은 문화 인프라로 큰 역할을 했다. 당시 페스티벌에서는 밤 10시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미디어 월을 통해 상영되었다.

이처럼 5월을 형상화한 작품뿐 아니라 광주 미디어아트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작품을 야간에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은 미디어 월의 철거를 아쉬워한다. 한 발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고밀집 다채널 음향시스템을 통해 5·18의 역사성과 가치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공유하는 데 미디어 월만큼 훌륭한 '도구'가 없다는 주장도 편다. 미디어 월은 설치비 26억 원이 들어간 광주의 소중한 문화 자산이다. 따라서 철거 후 재활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인격이란 사람의 됨됨이를 의미한다. 사전에서는 '도덕적 판단 능력을 지닌 자율적 의지의 주체'라 규정한다. 사람의 인격은 짧은 시간에 크게 변화되지 않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다르게 포장하고 행동할 때가 종종 있다. 처한 상황이나 주변과의 관계를 위해서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타인에게 파악되는 자아 또는 사회적 지위나 가치관에 의해 투사된 성격'을 페르소나(persona)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페르소나는 고전극에서 배우가 사용하는 '가면'을 뜻한다. 융은 페르소나를 '한 사람의 인간이 어떤 모습을 보이도록 드러내는가에 관한 개인과 사회적 집합체 사이에서 맺어지는 일종의 타협'이라 정의했다. 타인 앞에서 실제 자신의 모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면이라는 것이다. 융은 페르소나를 좋고 나쁨의 의미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필요한 수단이라 여겼다.

가면 놀이

사람들은 가정과 직장 그리고 친구 관계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다양한 페르소나를 갖고 살아간다. 그래서 개인의 말과 행동에는 가면과 얼굴의 경계가 애매할 때가 있다. 가정과 직장에서 전혀 다

른 성격을 보이는 경우가 그렇다. 특히 자기 정체성이 약한 사람이 특정 이익집단에 소속되면 그 경계는 뚜렷해진다. 우리는 정치인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당리당략에 따라 가면을 쓴 듯 평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모습이다. 가면을 쓰고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만 맨얼굴을 노출시키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어전에 비리 정치인들이 자신의 죄가 들롱나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었다. '나라

가 걱정'이라고. 전 재산 29만 원으로 골프를 즐기는 한 노인은 광주학살 책임을 물으면 오히려 자

신이 피해자라며 큰소리치고, 수많은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어느 국회의원은 손가락

으로 다른 사람을 가리키며 꾸짖는다. 평생을 민주화운동 탄압에 앞장섰던 사람이 지금 소위 '민주 투사'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은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사람들은 위선에 가득 찬 맨얼굴을 보고 있는데, 자신은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는 가면이 벗겨진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국통 신청 배탈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월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구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